

국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정책 ①

양 현 수 충남대 기획연구실장

1. 서론 :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당위성

국가가 국립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대학으로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학문의 육성과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고등교육 발전을 실현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국립대학이 교육·연구·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 차원에서 자체수입을 현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고, 정부보조금 비율이 상향되기 어려우며, 학생등록금 인상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에 대한 공비부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대학에는 대학운영비의 78%를 정부가 지원하였으며(1986년), 영국은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프랑스

와 독일은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1964년부터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교부금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동건·선우중호, 1992 : 98).

우리 나라 국립대학의 재정은 주지한 바와 같이 국고 지원분인 '국고회계'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로 짜여지는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고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입대체경비로 나뉘는데, 일반회계란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이 정부예산으로 편입됐다가 국고 형태로 다시 각 국립대에 환원되는 예산을 말하며, 수입대체경비란 입시 전형료, 논문 심사료 등 각 국립대의 자체 수입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외국에 비해 10~20%에 머무르고 있고, 대학별 총예산 중 학생부담률이 거의 5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며(김종운 외 8인, 1992 : 55~56), 이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과 대학의 자체수입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변화

1)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내용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립대학의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에 대한 정상비 지원, 둘째,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모든 대학에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하는 일반지원, 셋째,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이 있다. 이들 정상비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반 지원, 그리고 경쟁 방식에 의한 특별지원은 각각 전체 대학관련 교육예산의 30%, 60%,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RR 제97-7-154:43).

경상운영비는 대학의 기본시설(infrastructure)의 구축을 위한 자본적 경비와 인건비·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며, 일반 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일정한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고지원 사업이다. 특히 특수목적 사업은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별로 평가하여 차등 지원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사립대간, 대학규모간 배분 기준에 대해 경쟁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정부의 배분원칙에도 각 대학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2) 대학재정 정책의 변화 : 대학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 31일에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대부분이 대학교육과 관련되었으며, 그후 세 차례 추가된 신교육개혁안에서도 대학 부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대학평가에 의한 선별지원, 차등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마련하며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학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국고지원 예산

은 대학 등록금과 무관한 순수 국고보조금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대학의 학생수, 자구노력 정도, 사업목적 등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면서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지원사업과, 국가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별 사업계획서 평가로써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차등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 등이다.

특수목적 지원비로서 국·공·사립대학 자구노력지원 사업비와 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공·사립대학의 시설·설비확충지원 사업비) 등의 일반사업 지원예산과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우수대학원 중점지원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말한다.

3)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분석 : 특수목적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주요 국립대학의 1997년도, 1998년도의 대학별 총 예산과 '순수국고보조금'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에 의하면 서울대의 경우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액수는 높으나 대학 총 예산에서 볼 때 낮게 나타나 있다. 표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대학은 주로 지방 거점대학으로서 다른 군소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서울대의 경우 1997년도는 1백84억 4천여만 원으로서 자체 대학의 총예산 2천3백38억 2천여만 원 중 7.9%를 차지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보조금액이 28억 1천4백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서울대의 순수국고보조금 지원액수는 다른 지방 국립대학에 비해서 훨씬 높지만 대학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지방 국립대에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금액은 대학 자체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즉, 지방국립대의 국고보조액에 대

(표 1) 1997년, 1998년 대학별 총예산 및 순수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 원)

대학명	1997년도			1998년 상반기		
	총 예산	순수국고보조금	총 예산 대비 순수 국고보조금 비율(%)	총 예산	순수국고보조금	총 예산 대비 순수국고보조금 비율(%)
강원대	81,886,657	9,936,383	12.1	85,488,412	8,385,731	9.8
경북대	120,413,368	15,106,873	12.5	121,066,397	1,618,438	1.3
경상대	84,712,256	4,201,660	4.9	84,079,998	3,956,049	4.7
부경대	89,712,256	9,092,299	10.1	86,724,888	7,421,862	8.6
부산대	120,820,403	12,323,577	10.2	111,847,834	5,505,358	4.9
서울대	233,827,267	18,442,948	7.9	235,952,889	2,813,973	1.2
전남대	108,779,573	11,004,355	10.1	111,128,311	7,669,791	6.9
전북대	108,288,878	8,367,219	7.7	95,984,014	1,568,278	1.6
충남대	104,574,657	16,800,473	16.1	100,654,342	7,492,529	7.4
충북대	90,335,944	15,503,833	17.2	87,135,780	5,791,550	6.6

※ 자료 : 한국대학신문, 제296호(1998. 11. 25).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순수국고보조금으로 1백68여억 원을, 1998년도 상반기에 74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금액은 대학 총예산을 기준으로 각각 16.1%, 7.4%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순수국고보조금이 대학의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예산 대비 순수국고보조금 비율은 충북대가 가장 높아 9백3억 3천여만 원 중 17.2%인 1백55여억 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 이외에 1백억 원대의 국고보조를 받은 대학은 경북대(총예산 1천2백4억 1천여만 원 중 12.5%인 1백51여억 원), 부산대(1천2백억 2천여만 원 중 10.2%인 1백23억 2천여만 원), 전남대(1천87억 7천여만 원 중 10.1%인 1백10여억 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목포해양대의 경우 지난해에 받은 순수국고보조금은 불과 4억 8천여만 원으로 총 예산 1백87여억 원 중 2.6%에 불과했다. 또한 여수대는 총 예산 3백10억 1천여만 원 중 2.7%인 8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으며 금오공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대부분의 군소 국립대가 10억 원대에 불과한 순수국고보조금을 받았다.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공·사립대학 '자구노력지원사업'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킴

으로써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도의 경우 본 지원사업은 기본지원(5%)과 사업 목적 및 정책유도지원(95%)으로 분할하여 평가 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본지원은 모든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지원을, 사업목적과 정책지원은 대학운영의 효율성,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성진출 및 국제화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표 2>는 1996~1998년도의 자구노력비와 실험·시설 확충사업비의 지원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자구노력지원비의 경우도 거점대학들의 수혜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도 자구노력지원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대학은 단연 서울대로 그 액수는 총 32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 다음은 부산대, 경북대 순으로 각각 22억 8천여만 원과 2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전남대(17억 6천여만 원), 전북대(16억 9천여만 원)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 밖에 충남대, 부경대, 강원대, 경상대, 충북대 등이 각각 10억 원대의 '자구노력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군소국립대는 낮은 액수를 기록, 목포해양대와 여수대의 경우 불과 2억 원 대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1996. 7. 26자로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대학 실험·실습설비기준은 1997. 1. 1 자로 폐지되고, 계열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부족소요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과별 교육용 부족기자재는 기자재확충사업비 투자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하여 2000년까지 학생 1인당 부족 소요금액을 100% 확보하며 보유중인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도 제고 및 고장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부품구입, 수리정비비 등의 부대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기본 방향이 있다고 하겠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기성회계 등 비 국고예산에서도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성회계, 발전기금 등 국고 이외의 자금에 의한 기자재확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이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7년도의 경우 서울대는 무려 70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국립 거점대학을 압도했다. 경북대는 울

해 상반기 26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 1997년 55억 1천여만 원, 1996년 21억 1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부산대는 올해 상반기 25억 3천여만 원, 1997년 52억 8천여만 원, 1996년 24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 밖에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전남대, 경상대, 충북대 등 각 지역 거점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 연간 26억여 원에서 59억여 원의 예산을 받았다. 반면 대부분의 군소 국립대는 적은 액수를 기록, 안동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은 서울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억 8천여만 원에 그쳤다. 이 대학은 1997년과 1996년에도 각각 불과 17억 1천여만 원과 13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공주대는 올해 상반기 6억 9천여만 원을 비롯, 1997년 19억여 원, 1996년 14억여 원을 지원받았으며 순천대는 올해 상반기 7억 6천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다소 많은 액수인 20억여 원을, 1996년에는 15억 8천여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 밖에 강릉대, 목포대, 창원대, 군산대 등 군소 국립대가 올해 상반기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원받았다.

교육부가 1996년도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원한 총 1백50억 원 중 52.7%인 79억 원이 국립대에 지원되었으나 그 혜택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불과했다. 서울대가 29억 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으며 부산대(11억 원), 경북대(8억 원), 전북대(7억 원), 충남대(6억 원), 강원대(5억 원), 경상대(5억 원), 전남대, 충북대(3억 원), 부경대(2억 원)를 받았고 나머지 국립대는 지원이 없었다.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은 대학별 특성화분야 중점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대응투자 등을 유도하고 지방공과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연간 40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방대학 중 국립 7개교와 사립 1

〈표 2〉96년도, '97년도, '98년도 대학별 자구노력비와 실험·시설 확충사업비
(단위: 백만 원)

대학명	자구노력비			실험·시설 확충사업비		
	'96	'97	'98상반기	'96	'97	'98
강원대	1,507	1,492	1,066	2,905	4,100	1,545
경북대	2,437	2,277	1,639	2,118	5,517	2,675
경상대	1,208	1,424	1,045	2,650	3,852	2,650
부경대	1,868	1,629	1,005	5,981	4,472	2,412
부산대	2,215	2,280	1,560	2,498	5,281	2,532
서울대	3,388	3,270	2,081	3,047	7,041	2,889
전남대	1,901	1,764	1,506	2,637	4,767	2,637
전북대	1,824	1,694	1,431	2,690	4,239	2,433
충남대	1,746	1,690	1,389	2,944	4,578	2,218
충북대	1,309	1,394	1,059	2,710	4,009	1,728
연세대*	916	521	577	3,267	3,590	3,220
고려대*	925	486	451	3,136	3,275	3,127
중앙대*	693	381	383	2,071	2,155	2,134
성균관대*	604	363	363	2,314	2,645	2,511

* 사립대학의 경우 '시설·설비 확충지원사업'을 말한다.

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는 신소재분야 특성화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우수대학원 중점지원사업'은 국가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문·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학문·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우수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연간 200억 원을 현재 5개교(이공계열 대학원)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국제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관계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5년간 1,000억 원(연간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개교가 지원받고 있다.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지원사업'은 1996년도에 시작되었고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육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장려함으로써 신교육체제의 확산·정착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대학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학의 일정 배수 대학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해서 최종지원 대상대학을 선정한다.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심사·지원하고 국·공립·사립간에는 구분 심사하지 않는다.

1998년의 평가영역은 공통심사기준 즉, 대학구조조정, 요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 대학의 정보화 등이고 세부 심사기준으로서 대학개혁 과제를 모두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세부항목별로 심사하였다. 1998년도의 경우 지원대학은 30개이고, 지원대학별로 4억 원~14억 원이 지원되었다.

'지방대학 특성화지원'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성화대학은 우선 예비평가를 통해 1차 선정된 대학들로부터 본 계획서 심사, 현지실사를 실시하

여 분야별(국제전문인력양성, 공학, 기초과학, 자유응모분야 등 4분야), 대학종류별, 설립별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평가내용은 특성화분야의 선정배경, 운영여건, 특성화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사업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속되며 총 1,000억 원(연간 200억 원 가량)을 28개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는 기초과학 특성화분야에서 지원받고 있다.

3.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평가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의 변화는 GNP 5% 계획에 따라 대폭 확대되는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평균적 배분원리를 지양하고 대학의 구조조정, 교원인사제도의 합리화, 대학의 정보화, 지역 및 산·학 협동화, 수업질의 향상 등 대학의 운영 환경과 교육개혁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대학재정을 차등화하는 정책으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기대되는 바 크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적 효과로서 대학의 효율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촉진하고, 연구의 첨단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경쟁과 평가에 의한 재정정책의 차등적 배분방식을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사립대간, 대학규모간 경쟁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정부의 배분원칙에도 각 대학의 입장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음은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대학재정 배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방국립대학 시각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평가는 기업체의 경영평가와 다르며, 궁극적으로 교육개혁의 본질에 초점을 둔 교육·연구의 수월성 평가이어야 한다.

시장모형에서의 기업의 생존전략이 경쟁의 우위와 이

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면 결국 기업의 목표는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통해서 자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원리가 교육부문에 도입·적용되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명분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가치규범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시장원리는 학문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직업주의적 관심이 팽배해지며, 대학은 학문연구기관이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기업설립의 근거가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제품의 생산(output)에 있다면 교육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가치와 윤리성을 갖는 인간을 배출(throughput)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본질은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에 있으며 결국 대학의 평가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며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경쟁방식에 의한 차등지원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분명한 목표(지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평가는 대학 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 및 단체와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며, 평가 준비기간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평가항목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학운영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수목적사업의 평가 지표설정과 지원방식은 사업의 목표, 대학의 환경과 전문성, 그리고 대학의 지역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대학

재정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대학평가의 지표는 대학별로 도출한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사회에서 획일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라 원래 교육개혁안이 지향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라는 기본목표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김재웅, 1997).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지역적 환경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만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평가지표를 점수화하고 서열화하는 작업은 오히려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넷째, 대학의 평가는 재정지원 차등화를 위한 대학간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기술·지식·정보가 공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쟁적 지원방식에 따라 대학간 지나친 경쟁으로 대학간 협동이 약화되고 있다. 즉, 대학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교환이 막히게 된다. 대학간 경쟁의 논리는 서로 다른 특성화 영역에 대한 공동의 협력이며 보완적 관계를 말한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정보의 유통과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설 및 인력의 공동활용도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학평가는 대학간 공유의 단절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는 시간적으로 장기적이어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기술과 정보의 독점이 아니고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립대학 예산의 경직성에서 볼 때 기성회비의 대응 투자 전환은 비효율성이 많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지구 노력 지원사업, 실험·시설 확충사업비,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등) 대학의 재정적 노력을 촉발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 국립대학에서 볼 때 실제로 조성하고 있는 대응투자액은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기금 혹은 민간부분의 예산지원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외부재원을 공익재단설립을 통해서 기금화할 경우 과실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 확보는 보통 기성회 사업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많은 군소 국립대학들은 예산편성 및 운용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될 소지가 있으며 편성된 예산계수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대응투자액의 부족이 교육부의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농수산부의 농과대학 특성화사업, 정통부의 정보통신 특성화사업

과 정보통신 전담교수 지원사업, 과기부의 지역연구센터 지원사업 평가에서 많은 대학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 특히 국립대학의 재정구조에서는 대응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대응투자방식을 완화 혹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학이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양현수**

양현수

서울대 화학공학과와 미국 유타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타대학 연료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충남대 화학공학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 「공업화학개론」, 「석유화학개론」과 「유기반도체의 합성과 특성화 연구」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